

〈제 647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신세계

#### ◆ 돌봄 이웃을 위한 1,000만원 지원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은 지난 2일 돌봄 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광주 서구청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 광주 서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천수 광주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간 이동제한으로 평소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이 높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패키지를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 광주은행

#### ◆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5천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발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호타이어

### ◆ 중국형 카니발에 OE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4세대 카니발의 중국형 모델 '지아화'(Jiahua)에 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을 OE(신차)타이어로 공급하며, 중국 출산 정책 변화 등 지아화의 흥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크루젠 프리미엄(KL33)은 금호타이어의 SUV 전용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도심형 SUV의 등장에 발맞춰 개발됐다. 고성능 SUV에 최적화된 스포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온로드에서의 △핸들링 △제동력 △고속 주행 안정성 등과 같은 기능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 나영산업

### ◆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준공



나영산업(회장 고정주)은 지난 2018년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1차 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국비펀드 150억원을 지원받아 2019년 7월에 착공한 하남 산단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나영산업의 대표인 고정주 회장을 비롯한 광주경총 김봉길 회장, 남화토건 최상준 회장,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박흥석 하남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9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262㎡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 지식산업센터 kbi하남은 연구개발 등 지식산업에 중점을 둔 지식동 223호실, 제조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동 66호실, 산단 종사자들의 원스톱 리빙이 가능한 기숙사동 141호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가동 29호실을 갖췄다.



## 금호타이어-기아차 임단협 타결 환영 성명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노사갈등을 빚던 지역의 대표기업인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최근 임단협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금호타이어는 1차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부결이 공장점거 농성 등으로 이어져 우려가 많았으나, 지난 25일 최종 타결을 이루어냈다. 통상임금 판결과 대외환경 악화 등 경영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

기아차 또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8.2%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는 기아가 10년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노사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금번 임단협 타결은 당해기업은 물론 수많은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계기로 금호타이어와 기아차는 향후에도 코로나19상황과 대내외적인 경영리스크를 극복하고, 노사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미래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선봉에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 08. 30

**광주경영자총협회**



## II. 광주경충 소식

###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준공식〉



본회 김봉길 회장은 지난달 31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준공식에 내빈으로 참석해 개관기념을 축하했다. 지식산업센터 kbi하남은 광주시가 최초로 승인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사업이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현대적 지식사업 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난 2018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1차 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된 (주)나영산업이 시행사로서 국비펀드 150억원을 지원받아 2019년 7월에 착공했으며, 남화토건(주)에서 시공을 맡았다.

### 〈중장년센터 제30,3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31,1일 이틀 동안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30,3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60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사무국 일지(8.30 ~ 9.3)

8.31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센터 제3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준공식 참석</li> </ul>	9.2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경충 관리자 비대면 온라인 회의</li> </ul>
9.1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센터 제3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li> <li>●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비대면 온라인 회의</li> </ul>	9.3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요조찬포럼 휴강 (코로나19)</li> </ul>



### 〈제1527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김형순(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제: 정유(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도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7월 23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회장에서 김형순(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을 초청 <정유(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도전>란 주제로 제152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석유산업은 플라스틱, 섬유, 고무산업을 비롯하여 화장품, 의약품, 비료, 농약 등 가공산업에 사용되고 에너지로 활용되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온실가스 문제가 지구의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중화학공업이고 수송용 에너지 비율도 높아서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8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이 덕분에 석유화학수출 세계 4위, 원유정제능력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1962년 석유화학산업이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석유화학 산업이다. 반도체산업도 중요하지만 석유화학산업도 규모가 크다. 이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연료전지와 소재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29개국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한 바 있다.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에너지정책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석유화학 에너지의 위상을 알고 에너지의 중요성과 앞으로 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1. 노사 동향

### ■ 고용부 2022년 예산은 고용회복 및 고용안정 분야에 집중

- 고용부 2022년 예산안이 8. 31 개최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예산안은 36조 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66억원(2.4%)증액됐으며,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
- 고용부 주요 예산은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분야로 편성

#### [참고] 고용부 2022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용회복· 고용안정 지원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지원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충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 훈련 등 대응체계 구축·지원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임시·일용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확충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22.6월 시행)」등 제정법령 현장 안착 뒷받침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편성
안전한 일터 조성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 1조원 이상 편성

### ■ 주요 완성차사 2021년 임금·단체교섭 동향

- 기아차 노사는 2021년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8. 30 조인식을 진행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8. 27) 진행 결과 28,600여명 중 26,945명 투표 18,381명 (68.2%) 찬성

- 합의안에는 ▲기본급 7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 + 350만원 지급, ▲특별격려금 23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주식 13주 지급 등이 포함

- 기아차 노사는 추가 별도합의를 통해 ▲직원용 첫차 구입할인 확대, ▲일반직·연구직 평일 연장근로기준시간 마련, ▲영업직 판매성과 누계승진 제도 개선 등을 합의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8. 31 개최된 13차 교섭에서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 3 진행 예정

-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보상금 830만원 지급, ▲2022년 연말까지 매 분기 15만원씩 한시적 노사화합수당 지급, ▲라인 수당 인상 등이 포함

#### ■ 금속분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고용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는 본사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8. 23부터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사무동 내 통제센터를 불법점거 지속

※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5,300여명 중 조합 미가입 근로자, 한국노총 조합원 및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 등 2,800여명은 자회사 채용에 동의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2,500여명 조합원은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주장

-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8. 25에 1,400여명 규모의 집회에 이어 8. 30에도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함에 따라, 당진시는 8. 25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2. 법제 동향

### ■ 박완주 의원(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4)

- (발의 이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시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삭제

### ■ 윤준병 의원(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5)

- (발의이유)현행법상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사유를제한하더라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
-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 윤미향 의원(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5)

- (발의 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기상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 마련

#### ■ 장철민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5)

- (발의 이유) ▲실제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월간 근로일수만 적혀있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현행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 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업 신고 허용

#### ■ 장철민 의원(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8. 25)

- (발의 이유)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는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적용 사업자 간 형평성 저해 우려
- (주요 내용)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

#### ■ 정희용 의원(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6)

- (발의 이유)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증액

#### ■ 김미애 의원(힘), 부모보험법안 발의(8. 26)

- (발의 이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주요 내용) ▲부모보험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부모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부모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부모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규정 ▲부모보험사업으로 부모보험급여를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모 보험료를 징수하고 부모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출산급여는 출산 4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급여는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에게 24개월간 지급 ▲보험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부모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

#### ■ 송언석 의원(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7)

- (발의 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
- (주요 내용) ▲ ‘접대비’ 를 ‘기업활동촉진비’ 로 변경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

#### ■ 이종성 의원(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7)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는데, 사회취약 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주요 내용)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

#### ■ 민형배 의원(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7)

- (발의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주요 내용)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가능

#### ■ 민형배 의원(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27)

- (발의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
- (주요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설치 ▲법위반 사실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시·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가능

#### ■ 정일영 의원(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30)

- (발의 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사후관리 규정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제한 의무, 가업종사 의무, 지분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위반 사유가 상속인 본인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까지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것은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촉진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
- (주요 내용) 승계받은 가업의 낙후되고 진부화한 기계설비 등을 자동화 방식의 설비로 대체하여 최소인력으로 가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경우, 장기적인 매출 감소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등 상속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

#### ■ 이수진 의원(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8. 30)

- (발의 이유)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학력등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
- (주요 내용) ▲고용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과 학력등의 차별 행위를 표시·조장하는 행위 금지 ▲공공기관·기업·교육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학력 차별행위 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방송 광고 기사 및 기타 게시를 직접하거나 방송, 광고, 기사 및 게시를 허용·조장하는 행위를 금지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 강득구 의원(민),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발의(8. 30)

- (발의 이유) 교육, 국가자격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
- (주요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학을 제한·거부하는 등의 학력 등 차별 금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력등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차별 금지 ▲국가자격 관리자·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 차별 금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정 명령가능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학력등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입증책임 부여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병철 의원(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30)

- (발의 이유)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인력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고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
- (주요 내용)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